

〈눈 떠보니 선진국〉 지은 박태웅 의장

〈오징어 게임〉의 현실판, 대입 사회 안전망에서 해법 찾아야

서태지가 〈교실 이데아〉를 발표했던 1994년, 전국 고3의 수는 900만 명에 달했다. 대학 신입생 정원에 비해 입학 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시절이다. 2022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수는 51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과거에 비해 학령인구는 감소했으며 대학 수는 증가했다. 현재 대입 전체 경쟁률은 1:1 이하이다. 어느 대학이건 원서를 냈다면 한 곳은 합격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입시 지옥’이다. ‘IT 현자’라 불리는 한빛미디어 박태웅 의장은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입시는 지옥일 수밖에 없다”고 일갈하며 “입시 문제는 입시 제도의 개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를 만나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한 답을 청해봤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nni@naeil.com 사진 배지은

선진국 된 대한민국
이제 ‘정의’를 세워야 할 때

진정한 선진국이란 ‘정의를 내릴 줄 아는 나라’라고 했다. 무슨 뜻인가?

한국전쟁의 잣더미에서 출발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앞선 나라들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됐을까?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은 여전히 GDP(국내총생산) 중심이다. 경제 발전의 어느 단계까지는 분명 양적 성장이 필요하다. 사춘기의 어느 시점까지 키가 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30세가 넘은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성장 기준을 키라 우기며 재고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선진국의 문턱으로 들어선 지금, 우리에게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의 조선 산업과 배터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 더 이상 베낄 사례가 없는 ‘맨 앞’에 섰다는 의미다. 선진국이 된다는 건 맨 앞에 서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다. ‘누가 빨리 달리



박태웅 의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 기자로 일했다. 1999년 대한민국 최초의 허브사이트를 지향하는 '인티즌'을 설립해 언론계와 벤처업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안철수연구소 경영지원실 실장, 웹보안 전문회사 '자무스' 대표이사, 포털 '엠파스' 부사장, 열린사이버대 부총장, KTH 부사장을 거쳐 현재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2021년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저서로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 있다.

사용자가 필요한 여러 사이트를 한 아이디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

나로 승부를 보는 고속도로의 앞줄이 아니다. 그 누구도 발을 내딛지 않은 황야에 서서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위해서 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준다면?

예를 들어보자. 4차 산업혁명, 원격 진료, 스마트시티는 아주 유명한 개념들이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정부에서 나온 자료 어디에도 제대로 된 정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기 위해 2년여의 사회적 토론을 거쳤다. 정부와 노동계, 시민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그게 독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렇다면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해 의견을 모은 거다.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데 토론으로 2년을 소비하냐'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독일에선 이미 4년 전에 완성한 일이다. 독일은 2년이나 시간을 들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보다 4년 빨랐다. 긴 호흡으로 멀리 본 결과다. 해답보다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경제와 문화가 함께 동반해가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기 여전히 '산업사회 틀'에 갇힌 교육

한국의 입시를 <오징어 게임>에 비유했다.

드라마 속 극한의 게임이 '공부'로 대체됐을 뿐 무조건 낙오자가 나온다는 점에서 같다고 본다. '공정한 룰'의 문제가 아니라 '판, 그 자체의 설계가 문제란 의미다.

지금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근대 산업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3대 특징은 '규격화-표준화-대량생산'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 교육과정-교과서-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선진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후진국 교육의 태도와 전략으로 키워내고 있다. 입시 지옥을 해결한답시고 입시 제도만 바뀐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를 하든 딱지치기를 하든 낙오하면 죽는 건 똑같다. 사회 안전망을 갖추지 않고 입시 제도만 바꾸는 게 딱 이런 모양이다. 여전히 '오징어 게임'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다.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방안에도 우려를 표했다.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답은 '글쎄요'다.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한 어떤 제도나 과목도 빛을 보지 못할 거라는 게 현직 교사들의 중론이다. 대입에 반영되지 않을 과목이 과연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설사 아이가 택한다 해도 학부모들이 용인할까?

더 침언하자면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교과목 등 교육과정 개편은 5~7년에 한 번꼴로 시행된다. 2007년에 나온 스마트폰이 10여 년 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에 5년이나 7년간 같은 것을 배워야 하다니. 이제 이런 관행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부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개편의 주축은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와 학생이 아닌 교육부와 교수들이다. 어떤 학과 교수가 '우리 과 정원을 줄이더라도 바뀐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OO과에 힘을 실어주자'고 하겠다. 교육과정 개편의 목적을 학생들에 뒤야 하나 정작 이들의 수요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 그저 대학과 학과 간 생존투쟁의 장이 돼버리는 것이다. 정작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된다. 어른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형국이다.

입시 지옥을 탈피할 근본적인 해결법을 제언한다면?

스마트폰이 한국에 상륙한 게 2009년 12월이다. 그 뒤 우리 사회에 일어난 변화를 보라. MP3와 디지털카메라, 팩스가 사라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평생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불확정성만이 유일하게 확정적인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교육은 '스스로 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뿐이다. 새로운 기술과 조우했을 때 혼자서 공부하고 익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심어줘야 한다. 또한 아이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하고픈

일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가 안전망을 갖춰야지, ‘입시가 잘못됐다’ ‘공정하지 않다’ 힐난하며 정시 100%를 외치는 건 ‘달이 아닌 손가락을 탓하는 것과 진배없다. ‘우리는 아직 보편 복지를 실현하기에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되묻고 싶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불행하게 해야 하나?’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로 손꼽히는 북유럽 국가들은 GDP가 몇천 달러일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금의 복지 기틀을 일궈냈다. 현재 우리나라 GDP는 3만 달러, 한 해 예산은 600조 원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우리보다 복지 예산을 적게 쓰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공부로 출세하지 않아도,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하고픈 일을 맘껏 해도 괜찮은 사회를 이제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GDP와 국민 행복도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당장 복지 예산에 큰 금액을 투자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이 해묵은 사회 안전망 확대 협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초·중·고에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자 AI 수학, AI 언어 등 인공지능 교과 과정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IT쪽의 전문가로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다.

먼저 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이 충분한지부터 살펴야 한다. 서울과 경기, 대구는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이 가능한 <정보> 교사 필요 인원 중 70%가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대전과 부산, 충남북과 제주는 50% 미만이며 강북과 전북은 30%도 안 된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AI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까.

문제는 지도 교사를 더 키워낼 뾰족한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현재 전국 사범대를 통틀어 컴퓨터교육과는 총 8개, 한 해 배출 인력은 겨우 200여 명이다. 적어도 500명 이상으로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전국 초·중·고에서 AI 관련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앞선 결과다. 이를 해결하려면 한시적으로나마 컴퓨터교육과의 편입 확대를 허용하고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이 <정보> 교사로 임용되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 그래야만 전국 학교에서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대폭 늘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앞으로의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 교사들의 발언권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 실제 일을 하는,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갖는 게 옳지 않을까. 게다가 대한민국 교사의 수준은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본다.

또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 교육과정 개편이 융통성 있게 이뤄지도록 각 교육청과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논리적인 사고의 훈련, 창조적인 아이디어,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력, 수학적 사고력 등 교육의 큰 틀은 공유하되 획일화된 줄 세우기는 이제 지양해야 할 때다.

교육의 종착역은 대입이 아니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심어주는 데서 ‘교육의 책임’은 완성된다. @